

#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실업 악화와 '新일어버린 세대'의 등장
- 환경문제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헤게모니 쟁탈전
- 한-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
- IT기술 활용이 미흡한 EU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저조
-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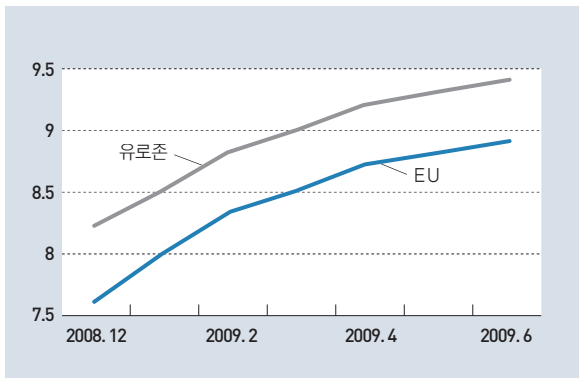
Yonsei-SERI EU Centre

	<b>EU Economy</b>	
	실업 악화와 ‘新잃어버린 세대’의 등장 Unemployment Worsens and a New Lost Generation Emerges	002
	동유럽의 금융위기 요인 여전히 상존 Risk of Financial Crisis Persist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004
	<b>EU Politics</b>	
	환경문제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헤게모니 쟁탈전 EU-US Hegemony Collide in Environmental Arena	006
	유럽 정치권에 부는 녹색당 열풍 Green Party Fever Grips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008
	<b>Trade Issues</b>	
	한-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 Meaning and Outlook of Korea-EU FTA	010
	<b>Industry Trends</b>	
	IT기술 활용이 미흡한 EU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저조 Insufficient Use of IT Retards Productivity Improvement at EU Companies	013
	<b>EU Law</b>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EU Common Commercial Policy and Korea-EU FTA	015
	<b>Social Issues</b>	
	유럽인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 The Majority of Europeans Seriously Worry About the Climate Change	017
	언어통합의 어려움과 EU의 다언어정책 Obstacles to Language Integration and the EU's Multi-Language Policy	020
	<b>Report Review</b>	
	이탈리아의 유로화 채택의 득실 Italy's Adoption of Euro: Gains and Losses	022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양호한 무역환경을 구축 European Countries Generally Have a Developed Trade Regimen	023
	<b>EU Centre news</b>	
	일본 게이오 대학 EU센터 주최 심포지엄 참석 Participation in symposium sponsored by Japan Keio University EU Center	024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개최 The 2 <sup>nd</sup>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024

# 실업 악화와 '新잃어버린 세대'의 등장

EU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09년 6월 실업률이 8.9%로 전월 8.8%, 전년동월 6.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 이래 최고 수치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2,153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약 25만 명 늘어났다. 유로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달 유로존의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 실업자 수는 전월에 비해 약 16만 명이 늘어난 1,490만 명이다.

★ EU 및 유로존의 월별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Eurostat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페인의 2009년 6월 실업률이 18.1%로 전월에 비해 0.2%p 상승하여 EU 내에서 최고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라트비아(17.2%)와 에스토니아(17.0%)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라트비아는 2008년 같은 기간에 6.4%, 에스토니아는 4.6%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0%p 이상씩 상승함으로써 실업률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3.3%, 4.4%로 EU 내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EU 최대 경제국 독일의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7.7%

를 유지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여서 고용시장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EU의 2009년 1/4분기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8.3%로,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전체적으로 EU의 청년 실업자의 수는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청년층 남성의 고용 상황이 여성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실업률은 19.1%, 여성은 17.4%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1차 세계대전 후 기존 가치체계의 붕괴로 혼란에 빠진 젊은 세대를 지칭하던 '잃어버린 세대(The Lost Generation)'라는 용어가 '新잃어버린 세대'라는 말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프랑스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제네라시옹 프레케르(불안한 세대)'라고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불안정(insecure), 압력(pressured), 세금부담(overtaxed), 부채(debt-ridden)를 합친 '아이팟(IPOD) 세대'라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무직자를 뜻하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약어도 최근 들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악화되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개별 회원국들은 청년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U집행위는 2010년 말까지 약 500만 명의 직업 연수생이나 실습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다. 영국은 고용보조금 지급, 창업 시 금융지원, 직업훈련 등 실직자에 대한 지원에 5억 파운드의 경기부양책을 편성한 바 있다. 프랑

★ EU 27개국의 실업률

(단위 : %)

지역분류	EU	2007	2008	2009	2010
유로 16개국	오스트리아	4.4	3.8	6.0	7.1
	벨기에	7.5	7.0	8.5	10.3
	핀란드	6.9	6.4	8.9	9.3
	프랑스	8.3	7.8	9.6	10.7
	독일	8.4	7.3	8.6	10.4
	아일랜드	4.6	6.3	13.3	16.0
	이탈리아	6.1	6.8	8.8	9.4
	룩셈부르크	4.2	4.9	5.9	7.0
	네덜란드	3.2	2.8	3.9	6.2
	포르투갈	8.1	7.7	9.1	9.8
	스페인	8.3	11.3	17.3	20.5
	그리스	8.3	7.7	9.1	9.7
	슬로베니아	4.9	4.4	6.6	7.4
	키프로스	4.0	3.8	4.7	6.0
동유럽	몰타	6.4	5.9	7.1	7.6
	슬로바키아	11.1	9.5	12.0	12.1
	불가리아	6.9	5.6	7.3	7.8
	체코	5.3	4.4	6.1	7.4
	에스토니아	4.7	5.5	11.3	14.1
	헝가리	7.4	7.8	9.5	11.2
	라트비아	6.0	7.5	15.7	16.0
	리투아니아	4.3	5.8	13.8	15.9
	폴란드	9.6	7.1	9.9	12.1
	루마니아	6.4	5.8	8.0	7.7
북유럽	덴마크	3.8	3.3	5.2	6.6
	스웨덴	6.1	6.2	8.4	10.4
영국	영국	5.3	5.6	8.2	9.4

주: 2009년과 2010년은 전망치  
자료: Eurostat

스는 청년층에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2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총 13억 유로 규모의 긴급고용대책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사회보험의 고용주 부담을 1년간 면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년간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독일도 실업률 증가로 고전하는 가계 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특히 독일정부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실업자 재교육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고, 직업교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연방노동청과 관련 기관에 5,000여 개의 고용중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률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용 악화가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EU의 2009년 민간소비는 1.5%, 유로존은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각국에서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감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재정적자만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동유럽의 금융위기 요인 여전히 상존

지난 2월 불거지기 시작한 동유럽발 연쇄부도설은 서유럽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고점 대비 급격히 떨어졌으며, 주식시장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헝가리와 폴란드 주식시장은 2/4분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이머징 국가 그룹에 속했다. 이렇게 되자 동유럽이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하자 “이번 유로 채 발행에 총 29억 유로의 주문이 몰려 당초 예상 규모인 5억 유로를 크게 웃돌았으며, 국가 신인도가 거의 정상적으로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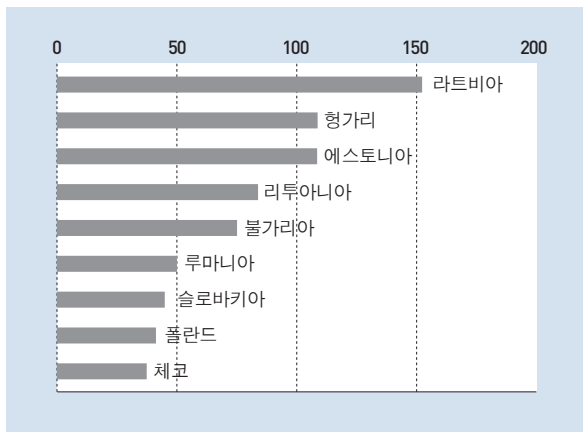
그렇다면 연쇄부도 위기 이후 동유럽 경제는 완전히 살아난 것일까? 불행하게도 동유럽 경제의 완전한 부활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위험들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 도사리고 있다. 물론 동유럽 국가들이 다시 연쇄부도의 위협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재차 위협받고, 실물경기 침체로 고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주장한 루비니 교수마저도 동유럽만큼은 제외시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유럽 경제가 안고 있는 복병은 무엇일까? 지난 연쇄부도설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높은 외채 비중, 재정적자 확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주가 및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높은 외채 의존도를 중심으로 한 취약한 거시경제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높은 대외채무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100%가 넘는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2009년 라트비아의 GDP 대비 대외채무는 154%, 헝가리는 113%, 에스토니아는 112%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는 1992~1993년 핀란드의 금융위기 당시 대외채무가 50%,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당시 20%, 1997년 태국 외환위기 당시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결국 높은 외채의존도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과거 수년간 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었던 해외자본 차입을 어렵게 만드는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2009년 동유럽의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 (단위: %)



자료: IMF, IFS, EIU, Country Report.

둘째, 과도한 재정적자도 문제이다.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의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EU의 가이드라인인 3%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유럽은 서유럽 지역과 달리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은 감소한 반면 정부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력은 물론, 기존의 공공부문 급여나 보조금 등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 EU 내 동유럽 10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8	2009	2010
슬로베니아	3.5	-3.4	0.7
슬로바키아	6.4	-2.6	0.7
체코	3.2	-2.7	0.3
헝가리	0.5	-6.3	-0.3
폴란드	4.8	-1.4	0.8
불가리아	6.0	-1.6	-0.1
루마니아	7.1	-4.0	0.0
에스토니아	-3.6	-10.3	-0.8
라트비아	-4.6	-13.1	-3.2
리투아니아	3.0	-11.0	-4.7

자료: Eurostat

셋째,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도 복병이다. 금융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동유럽의 실물경기 침체는 아직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이 지역의 2009년 연평균 GDP성장률은 -5.3%로 전년 대비 무려 7%p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발틱 3국은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EU 2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동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최근 라트비아의 실업률은 EU 최고 수준인 17.2%, 에스토니아는 17.0%, 리투아니아는 15.8%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로화 채택으로 금융시장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슬로바키

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GDP 대비 76%가 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해 성장세가 급감하였으며, 최근 실업률은 11.7%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유럽의 뿌리 깊은 위협 요소들이 EU 전체의 경기회복까지 제약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당장 연쇄부도설과 같은 급박한 위협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실물경기 침체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금융불안으로 발전된다면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기업들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안주하기보다 리스크 측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전략을 파악해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동유럽 주요 자금공급국(Common Lender)의 대형 은행 재무상태와 지역별 자금조달 및 운용 전략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쇄부도의 위협이 줄었다고는 하나 환율변동폭 확대, 실업률 증가, 자산 가격의 하락 등에 주의하면서, 환율, 재고, 채권 등과 관련된 리스크에도 늘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에 대비해 동유럽 진출 전략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미 투자한 공장 및 시설에 대해서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유럽 금융위기는 1990년대 말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흡사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구미나 일본 기업들의 M&A를 통한 동아시아 진출 전략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환경문제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헤게모니 쟁탈전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sup>1</sup>을 통과시키면서 유럽과 미국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을 치르고 있다. 이제 세계 정치경제 구조는 환경 이슈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환경 이슈는 세계 자본주의의 틀을 새롭게 짜고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탄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이번 법안을 통해 12월에 있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실질적 논의를 주도하며 실추된 미국의 헤게모니를 재확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수십 년간 호황기를 창출할 것으로 인식되는 환경산업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속가능 성장'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2008년 저탄소 경제정상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녹색성장과 생태효율성 혁명을 제3의 산업혁명으로 꼽고 있다.

19세기 말의 철도와 20세기 초의 자동차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전후방 연관 산업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 수십 년간 호황기를 창출한 산업이었다. 이제 그 자리를 환경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환경산업에서 핵심기술을 지닌 기업들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정부와 기업 간의 '코아비타시옹(동거)'이 전개되고 있다.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각종 환경산업을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미국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상상하기 힘든 변화다.

<sup>1</sup> 정확한 명칭은 「美 청정에너지 안전법(ACES: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 세계 자본주의의 판도를 변화시킬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번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탄소배출권 거래(Cap and Trade) 법안」이 올 가을에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오는 2012년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채택되어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핵심 내용은 선진 38개국들이 2008~2012년 기간 동안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탄소배출권 제도'이며, 이는 2005년 이후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왔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권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기업 간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 목적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그 기제는 '시장 인센티브'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인센티브란, 허가된 이산화탄소 기준치 이상으로 생산시설을 가동할 경우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의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워 청정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협약이 마련되면 의무감축 대상국이 대폭 확대되어 결국 탄소배출권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기후거래소(ECX)의 배출권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거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지난 7월 29.33유로였던 선물가격이 2009년 2월 8.20유로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14유로 선까지 회복되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갈 경우 2010년에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정부가 시장을 창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출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누가 생산하느냐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구성이 결정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발행 주체가 정부다. 정부는 탄소배출 한도, 배출권의 발행 가격, 분배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단순히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창조된다.

한편 정부가 창조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버넌스 내지 레짐으로 군림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문제는 또 다른 정치적 함의가 있다. 앞으로 탄소배출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될 기구는 또다시 주권침해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국제기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새롭게 탄생할 탄소배출권 관련 기구는 감시권을 넘어서 제재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세계가 줄곧 장악해온 국제기구가 또 하나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정치적 잣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주권의 범주를 넘어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세계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정부 사회체제<sup>2</sup>의 논리가 글로벌 이슈를 통해 당위성을 잃게 될 수 있다.

## 미국에게는 정치적·윤리적 헤게모니를 재확립하는 기회

환경주의가 지닌 국내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미국과 유럽의 국내정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지난 6월 26일 미국 하원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펠로시 하원의장,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모두 걸고 뛰어든 꽤 굵직한 사안이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을 헤쳐나갈 돌파구로 환경문제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12년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진행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미온적 태도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sup>2</sup> 주권이 있는 국가를 다스리는 세계정부는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개별 국가의 주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정부사회체제론의 논리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로마에서 개최된 G20 확대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지구의 기온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C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영국의 헤게모니가 빛을 바래고 '헤저몬(Hegemon)' 국가에서 '해저문(해가 저문)' 국가로 추락한 뒤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쥔 것은 미국이었다. 1919~1939년에 이르는 20년간의 戰間期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의 자리를 옮겨놓은 중요한 '위기'<sup>3</sup>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불어닥친 두 번의 오일쇼크와 베트남전에서의 패배는 미국의 힘이 쇠약해지는 징후를 확인시켜주었다. 이후 조금씩 미국의 패권 쇠퇴론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미국은 어떠한가? 對테러 전쟁에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은 1998년과 2008년 두 번의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정치경제체제의 관리자로서의 위상이 몹시 손상된 상태이다. 1998년 금융위기는 러시아의 원유가가 급락하여 파생상품시장이 붕괴되면서 미국 금융시장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결과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발'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닌다. 이러한 최근 사건들은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이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구 온난화'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세계정부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 및 윤리적 헤게모니를 재확립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토체제를 주도해온 환경선진국 EU와 초강대국으로서 환경후발국인 미국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3</sup> Carr, E. H.(1939), *The Twenty Years' Crisis*, 으로부터 비유



# 유럽 정치권에 부는 녹색당 열풍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행보가 두각을 나타냈다. 의석 수와 국민적 지지가 부족한 중도좌우 정당들이 유럽 정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녹색당과 동맹을 원하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높은 의석 수를 기록하였고, 특정 인물이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등 녹색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좌파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타난 투표유동성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개발과 무역의 이슈를 넘어 정부와 시민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환경협약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지도 관심 사안이다.

##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진일보한 녹색당

지난 6월 4~7일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 녹색당은 거대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3억 7,500만이 넘는 유럽 시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736명의 유럽의회 의원(MEPs) 가운데 55명을 녹색당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는 전체 의원의 7.5%에 해당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우파가 좌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선전한 사실에 주목하다 보니 녹색당의 진일보를 눈여겨볼 겨를이 없었다.

6월 8일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정치그룹별 의석 확보 수에서 국민당 그룹이 전체 736석 가운데 의석의 36%에 해당하는 265석을 차지하면서, 기존 의석 수(36.7%)와 큰 차이 없이 여전히 강력한 무게중심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사회당 그룹은 184석(25%)을 확보하여 기존의 27.6%에 비해 비중이 줄었다. 이는 유럽 무대에서의 좌파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곤 했다. 하지만 유럽의회 내 좌파 세

력인 좌익 그룹과 사회당 그룹이 연합하여 녹색당을 끌어안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회당과 녹색당을 합하면 239석이 되고, 여기에 유럽좌파동맹(GUE/NGL)이 합세하면 총 274석이 된다. 이는 전체 의석 수의 37.2%에 해당된다.

## ★ 유럽의 선거 결과

정치그룹	의석 수	비중(%)
국민당(EPP)	265	36
사회당(S&D)	184	25
자유민주연대(ALDE)	84	11.4
녹색당/자유연대(GREENS/EFA)	55	7.5
유럽보수개혁그룹(ECR)	54	7.3
유럽좌파동맹(GUE/NGL)	35	4.8
유럽자유민주(EFD)	32	4.3
무소속(NI)	27	3.7

자료: European Parli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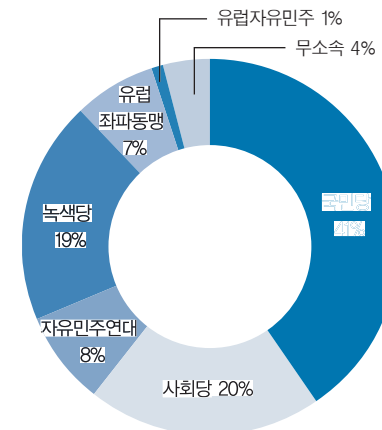
## 녹색당 열풍은 좌파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타난 투표유동성의 결과

녹색당의 진일보는 프랑스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다. 총 72석 가운데 국민당 그룹이 29석, 사회당은 14석, 자유민주연대가 6석을 차지한 가운데 녹색당이 무려 14석을 차지하였다. 녹색당은 19%라는 높은 지지율(3위)을 기록하면서 지지율 7~8%에 그친 유럽좌파동맹(GUE/NGL)이나 자유민주연대(ALDE)를 앞질렀다.

이러한 녹색당의 진일보는 일각에서는 정당소속감의 변화와 투표유동성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한다. 즉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좌파정권들에 대한 불만이 유럽 시민 차원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유럽 시민들이 좌파에 대한 불만을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투표유동성이 증가하였고, 유럽 좌

파정당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소속감은 하락하였다.

## ★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석 비중)



자료: European Parliament

## 녹색당 열풍을 이끈 다니엘 콘벤디트는 과거 68혁명의 주도 세력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 있다. 다름 아닌 다니엘 콘벤디트이다. 그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독일인이다. 15년째 유럽연합 녹색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콘벤디트는 1968년 프랑스의 정신을 이끈 68혁명의 주동자이다.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콘벤디트는 프랑스 정치사의 역사적 분기점을 이룬 68혁명의 주동 세력이 되었다. 프랑스 전후 사회학의 대가인 알랭 뒤렌이 당시 콘벤디트의 변호를 맡았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콘벤디트는 좌파인가? 그렇지 않다. 콘벤디트는 좌파와 거리를 둔 채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 그의 인기도는 56%에 달하며, 야권 정치인 중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콘벤디트는 달변가로도 유명하다. 유럽연합 선거를 앞둔 논쟁에서 인신 공격적인 비판을 일삼는 중도파의 프랑수와 바이루를 맞받아친 그의 논리적 달변은 아주 유명하다. 반정부의 선봉장으로서 프랑스인들은

국적을 뛰어넘어 콘벤디트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콘벤디트는 집권여당이나 사회당의 연대 형성에 대한 제안을 거절해왔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연대가 절실한 가운데 콘벤디트의 태도에는 연대가 아닌 녹색당의 홀로서기에 대한 그의 야망이 숨어 있는 듯하다.

##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환경문제에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는 사르코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그가 대선 당시 약속한 환경협약에 대해 향후 이를 실천에 옮길지가 관건이다. 지난 6월 18일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녹색당 당수인 다니엘 콘벤디트 의원을 만난 사르코지는 환경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사르코지는 앙리 귀아노를 환경 자문역으로 대동하였는데, 이는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신호로 인지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대선 유세 당시 니콜라 월로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는 조건으로 후보들에게 제안한 환경협약에 대한 지지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니콜라 월로는 유명한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국민적 인기가 높은 환경운동가이다. 그는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지명도 1순위의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역시 대선 후보 출마에 대한 루머가 떠돌았다. 그러나 니콜라 월로는 출마를 거부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환경운동가답게 환경협약을 제안하여 동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녹색당과의 토론장에 니콜라 월로를 자문역으로 삼지 않고 앙리 귀아노를 자문역으로 대동하였다.

사르코지로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면서도 그리 반갑지 않은 주제일 것이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끌어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

한-EU FTA 협상이 2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되었다. 그동안 관세환급, 원산지기준 문제 등으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으나, 양측이 절충안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 검토, 가서명,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상반기에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은 수출시장 확대, EU는 전략적 고려가 주요 추진배경

EU는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2008년 한국의 對EU 수출은 583.7억 달러(비중 13.8%, 2위), 수입은 399.8억 달러(비중 9.6%, 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의 對EU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1위)로 對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를 추월하였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국들이 EU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는데 반해, 한국은 3% 이하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국의 EU시장 점유율은 1996년 5.6%에서 2002년 9.5%, 2007년 16.2%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한국은 FTA 발효 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시장 점유율이 '魔의 3%'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對EU 수출은 120억 유로 증가(EU집행위 추정 기준)하여 EU의 시장점유율이 3.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도 한-EU FTA는 의미를 가진다. EU는 한국에게 교역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큰 상

대이지만,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유대관계, 국가별 교역 규모 등으로 인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된 게 사실이다. 이렇듯 서로 먼 나라로 인식되던 한국과 EU가 2년 이상의 오랜 협상 기간을 거쳐 FTA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한국을 정점으로 동북아 FTA 협상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가 한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을 놓고 EU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도 한미 FTA 비준을 무작정 질질 끌 수만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EU FTA의 타결은 한미 FTA의 비준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한미 FTA로 인한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FTA를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EU는 한국을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상대적으로 농업 이슈가 덜 민감하고 이민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철폐

타결내용은 9월 가서명 이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주요 타결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우선 EU 측이 한국에 비해 초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비대칭적인 방식이 채택되었다. EU 측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양측의 최대 관심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관세환급은 한국 측

## ★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철폐시기	EU의 對한국 수출(EU→한국)	한국의 對EU 수출(한국→EU)
즉시	자동차부품, 계측기, 타이어, 복사기, 서류절단기, 컬러TV, 냉장고(이상 8%), 직물의류(8~13%) 등	냉장고(1.9%),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2~5%), 평판디스플레이(3.7%), 편직물(8%) 등
	수입액 비중 70%	수입액 비중 76%
3년 내	의약품(6.5%), 기타 정밀화학제품(5~8%), 무선통신기기 부품, 펌프, 화장품, 중대형 승용차(이상 8%) 등	타이어(2.5~4.5%), 전자레인지(5%), 합성수지(6.5%), 베어링(8%), 중대형 승용차(10%) 등
	수입액 비중 22%	수입액 비중 17%
5년 내	접착제(6.5%), 기초화장품, 합성고무, 소형 승용차(이상 8%) 등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컬러TV, 카메라/수상기기, 소형 승용차(이상 8%) 등
	수입액 비중 7%	수입액 비중 7%
7년 내	건설중장비, 밸브, 베어링(이상 8%), 순모직물(13%), 기타 기계류(16%) 등	없음
	수입액 비중 1%	수입액 비중 0%

자료: 외교통상부, 각종 보도자료 종합, 이종규(2009),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요구가 관철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세환급의 규모와 효과가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그동안 관세환급을 허용하지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EU는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하더라도 극히 한시적으로만 인정해왔다. 한 예로, EU는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발효 5년 후부터 외국인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를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환급과 더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자동차 원산지기준에 대해서도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은 부품 및 원자재를 동아시아나 동남아로부터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한국은 EU 측에 품목번호 변경 기준을 채택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상한을 45% 선에서 합의하였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통신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할 분야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 측이 EU에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한 분야는 전

문직 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정 분야,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건설, 금융, 관광, 운송 등이다. EU가 아직 개방하지 않은 분야인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은 한국기업의 진출 의사가 희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U는 금융, 법률, 유통, 운송, 통신, 방송(뉴스 서비스)시장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농산물은 한국 측이 유리하도록 쌀, 보리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 방안을 최대한 확보했다. 쌀 등의 기초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며, 보리는 EU의 관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 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양허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협상대상 품목은 한국의 對EU 수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부문이다. 특히 EU에서 많이 수입하는 냉동 삼겹살<sup>1</sup>은 '10년 내',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주류는 와인의 경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15%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스카치위스키는 '3년 내' 20% 현행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sup>1</sup> 2008년 한국의 EU産 냉동 삼겹살 수입액은 2.8억 달러



# IT기술 활용이 미흡한 EU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저조

## IT기술의 활용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

EU는 2010년까지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실현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해왔다. 리스본전략의 핵심 목표는 EU경제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생산성과 혁신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요소로 산업계의 IT기술 활용을 중시해왔다. 그렇다면 목표시한인 201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EU 산업계의 IT기술 활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EU의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EU 회원국들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혁신활동과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IT기술의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IT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 기업 경영에 있어 비용 절감과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혁신전략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데, 여기서 IT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IT기술은 자동차 생산 및 금융서비스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보편화된 생산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저조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하고 IT 기반의 혁신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IT기술의 기업 업무 프로세스 적용은 이론적으로 크게 4단계(정보수집, 온라인 거래<sup>1</sup>, 내부 프로세스 통

<sup>1</sup>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전자결제

<sup>2</sup> 오더프로세스(order process) 시스템의 구매, 회계, 생산, 물류 및 서비스 등 기타 내부 시스템과의 통합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칭

합<sup>2</sup>, 대내외 프로세스 통합)로 나눌 수 있다.

IT기술의 활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비즈니스의 응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내부 프로세스 및 사업구조의 재정비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IT기술의 활용에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인터넷을 구매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EU 15개국의 기업들 중 44%가 웹사이트를 통해 부품 및 원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전체의 67%)인 반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기업들은 2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인터넷 사용이 저조하였다. 반면, 인터넷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았다. EU 15개국 기업의 16%만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매출 중 단지 4% 만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 첨단 응용시스템의 활용이 미흡

데이터의 상호 교환이 완전 자동화되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될 경우 기업은 IT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합하기 위해 응용시스템을 CRM이나 ERP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EU기업의 4분의 1만이 기업 내부적으로 고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CRM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놀랍게도 20%에 불과하였다. 평균 수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ERP나 CRM 시스템의 사용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더프로세스(order process) 분야에서는 IT

## 기존의 주력 품목 위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

한-EU FTA는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수출 증대 효과도 크지만 수입 증가 또한 동시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EU 간 교역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의 주력 공산품목에서, EU는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에서 각각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한국의 對 EU 수출 비중(EU시장 내 기존의 경쟁력 효과)과 관세율(예상 가격인하 효과)이 동시에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그룹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 LCD, 컬러TV 등이 속한다. 또한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 관세율은 낮지만 이미 EU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들은 FTA로 인한 무형의 효과(국가 인지도 제고 등)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U의 기술표준이나 환경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원산지기준 준수 여부, 높은 현지 생산 비중으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축소 등은 각 기업들이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다. 또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는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sup>2</sup>

수입 측면에서도 수입 비중(한국시장 내 기존의 경쟁력 효과)과 관세율(예상 가격인하 효과)이 동시에 높았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EU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화장품,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등 한국의 경쟁력이 약했던 일부 제조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 자동차시장의 경우, 최근 높은 판매 증가율을 보이는 일본산 자동차, 중대형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국산차, EU산 자동차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EU FTA 이외에도 한미 FTA로 인해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의 對EU 서비스 적자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서비스 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 통신,

환경, 에너지,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EU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은 민감품목을 제외한 일부 품목, 즉 돼지고기, 와인, 위스키, 낙농품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4가지 품목이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를 넘는다.

##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비할 필요

한국은 기계, 화학 등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對日 수입선 전환을 통해 만성적인 對日 무역역조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EU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對美 의존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도 기대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 축산업, 농업 등 FTA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 향후 구조조정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와 예상 피해 규모, 서비스 물가인상의 예상치, 공적 서비스 축소에 따른 계층별 파급효과 등의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 현지부품 사용비율 준수, 환경 기준, 기술적 장벽 등의 비관세장벽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FTA 발효 이후에도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꾸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하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2</sup> 對EU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서비스업은 14.3%에 불과



#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 공동통상정책은 EU 무역정책의 근간

EU는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을 근간으로 양자 및 다자간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CAP)과 함께 EU의 배타적인 권한으로 인정되는 공동통상정책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는 구별된다. 관세동맹이 EU의 내부 통상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공동통상정책은 외부의 통상질서(대외 통상정책)를 다룬다.

EU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국제통상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조약에 따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과 이후 관세동맹의 완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였다. 공동통상정책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EU 회원국들의 협상력 강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은 초기에 정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EC)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딜론 및 케네디 라운드에서부터 집행위원회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는 EC조약 제131~134조의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을 수행하는 주체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시민사회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집행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는 공동통상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이사회가 통과시켜 확정된 입안에 대해 직접 시행하거나, 각 회원국들에서 해당 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또한 양자 및 다자간 협

상에서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위원회에 협상권한을 부여하고 정책안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이른바 ‘133조 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133조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상호 견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공동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할범위인데, 이는 결국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한배분의 접점에서 균형 및 조화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133조위원회이다. 각 회원국들은 각료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133조위원회에 참가하는 대표를 통해 자국의 이익 및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집행위원회가 FTA 협상을 주도

EU의 FTA 협상은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통상정책은 FTA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EU의 전반적인 통상기조를 고려해볼 때, 우선 공동통상정책에 관여하는 각 기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 통상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통상정책의 제안과 협상 등 모든 실무가 집행위원회의 관할에 따른다는 점인데, 최종결정권이 회원국들의 장관모임인 각료이사회에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EU가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할 경우에는 먼저 집행위원회가 각료이사회에 FTA 협상 개시를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각료이사회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집행위원회는 대상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협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기업의 약 45%가 오더 프로세스를 인보이싱 및 결제, 교체부품의 배송, 물류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주는 IT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IT기술의 활용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는 오더프로세싱에 IT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반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는 40% 미만에 불과하다.

기업 내부 프로세스를 외부 공급업체나 고객의 시스템과 통합하는 예는 서유럽 기업에서 대체로 찾아볼 수 없다. EU 15개국에 있는 기업들 중 약 15%만이 오더프로세스 시스템을 외부 거래선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이 중 공급업체와는 12%, 고객과는 10%의 비율). 하지만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독일의 경우, 주요 제조업체의 약 44%는 디지털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의 경우 그 비율은 64%에 이른다. 이밖에 식품(57%), 금속가공(49%), 도매유통(49%) 등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인보이스를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노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해 총 540억 유로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혜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인보이싱을 이용하지 않을까? 기업 간 상호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공급업체의 관심 부족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 IT기술 활용은 국가와 기업 규모별로 큰 편차

e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의 활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북유럽과 독일은 선두국가에 속하는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낙후국가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도 e비즈니스 활용은 차이가 크다. 중소기업은 IT인프라, 내부 및 외부 응용시스템 등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에 비해 저조하다. 특히 ERP 시스템(42%p)과 모바일인터넷 접속(40%p)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현저하다. 이는 복잡하게 연결된 응용시스템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e비즈니스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 과도한 비용과 영세성, 내부 전문가 부족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도가 낮은 것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부진한 생산성 증가를 고려할 경우, 산업 경쟁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주요 어젠다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은 EU 부가가치의 50~70%를 담당하고 있어 e비즈니스의 활용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업 파트너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리스본전략하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이 현저히 부진한 국가들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한편 EU 8개국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e비즈니스 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e비즈니스 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의 생산성 부진은 IT기술의 활용도 미흡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럽 기업들이 사용 중인 응용시스템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IT 기반의 첨단 응용프로그램도 조사대상 기업 중 고작 20~25%만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향후 수년 내에 시장 성숙도와 기술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나 기업 간에 IT기술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서비스 업체들은 기업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IT기술 활용의 국가 간, 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하우 공유와 기술 표준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IT기술의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한다’는 리스본전략의 원대한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면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다시 각료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각료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통상정책을 결정한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각료이사회는 하부조직 중 상주대표부 역시 각료이사회 의 지시에 따라 통상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며 각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 공동통상정책에서 회원국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

공동통상정책의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이 '배타성(exclusivity)'이다. 배타성은 특정 분야에서 공동체의 권한이 증가하면 회원국들의 권한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EC조약에서 공동체가 달성해야 할 목표에 따라 공동체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은 유럽공동체에 배타적인 권한권이 부여된 분야이다. 그러나 공동통상정책의 관할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조약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논란이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협상 무대에서 집행위원회가 조약에 규정된 관할범위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반발이 증가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특히 1973년 도쿄라운드 당시 보조금, 정부조달, 기술장벽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권한 중 어디에 속하는 사항인지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어 이사회 의 위임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협상을 하긴 하였으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198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서비스 교역, 투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쿄라운드 때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면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논란이 심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의 관할범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EU에서도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 문제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 리스본조약 발효 시 공동체의 권한 확대

리스본조약은 2008년 6월 아일랜드에서 한 번 부결되어 2009년 10월 다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EU 거버넌스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공동통상정책은 EU의 대외행동과 조화를 이루며,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과 입법절차에 있어 유럽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유럽의회는 제3국과의 협상정보를 집행위원회와 공유하게 되어 통상교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으로 확대된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또한 배타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가 확대되었는데, 유럽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공동관할권 분야에 있었던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사회·교육·보건 서비스를 유럽공동체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로 이전하여, 동 분야에서 제3국과 교섭 시 유럽공동체와 회원국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경우를 배제하되, 다만 동 분야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에서 가중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요건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실제 새로운 배타적 관할권 분야에 대한 해석은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 조치가 회원국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저해하는지, 사회·교육·보건서비스 관련 조치가 회원국 공공서비스 관리정책을 저해하는지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리스본조약의 절차에 따라 한-EU FTA가 비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동 조약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은 EU의 대외행동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회원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게 된다.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럽인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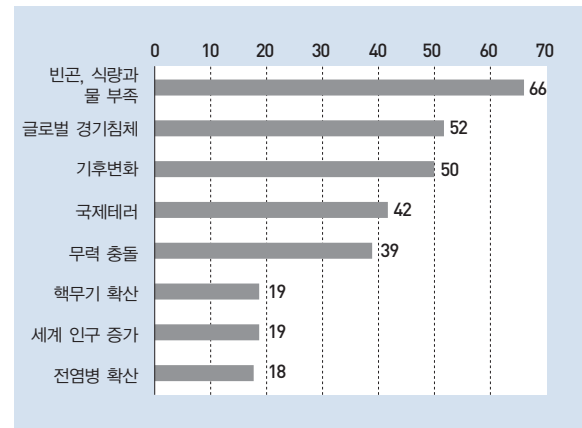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어왔다. EU는 환경선진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新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통제를 위한 다자간 협상 및 다양한 활동<sup>1</sup>을 통해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12월 EU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를 최대한 막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담은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Integrated Package of Legislative Measures on Energy and Climate)」를 채택하였다.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삭감하고,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EU의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령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며,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이제 정치적 이슈를 뛰어넘어 국제미디어를 통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집행위와 유럽의회는 TNS Opinion & Social network을 통해 2009년 1~2월 사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sup>2</sup> 설문조사에는 인구사회 통계변수(성별, 나이, 학력, 직업, 정치성향)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얼마인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 '글로벌 경기침체', 그

리고 '기후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는 식량과 물 부족 등 '빈곤'이 가장 심각한 글로벌 이슈라고 답했다. 두 번째를 차지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꼽은 응답자는 52%에 달했다. '기후변화'는 응답자의 50%가 답해 3위를 기록하였다.

★ 다음의 보기 중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단위 : %)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7), Europeans' Attitudes towards Climate Change (Special Eurobarometer 313).

국가별로 살펴보면 무려 82%에 달하는 스웨덴 국민이 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한 세계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뒤이어 키프로스(76%)와 그리스(71%)가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폴란드(33%), 체코(33%), 터키(32%), 포르투갈(30%)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 통계변수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빈곤, 식량과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55세 이상) 젊은 세대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up>1</sup> European Commission, Climate Action.  
[http://ec.europa.eu/climateaction/index\\_en.htm](http://ec.europa.eu/climateaction/index_en.htm)  
<sup>2</sup> EU 27개국 국민 2만 7,218명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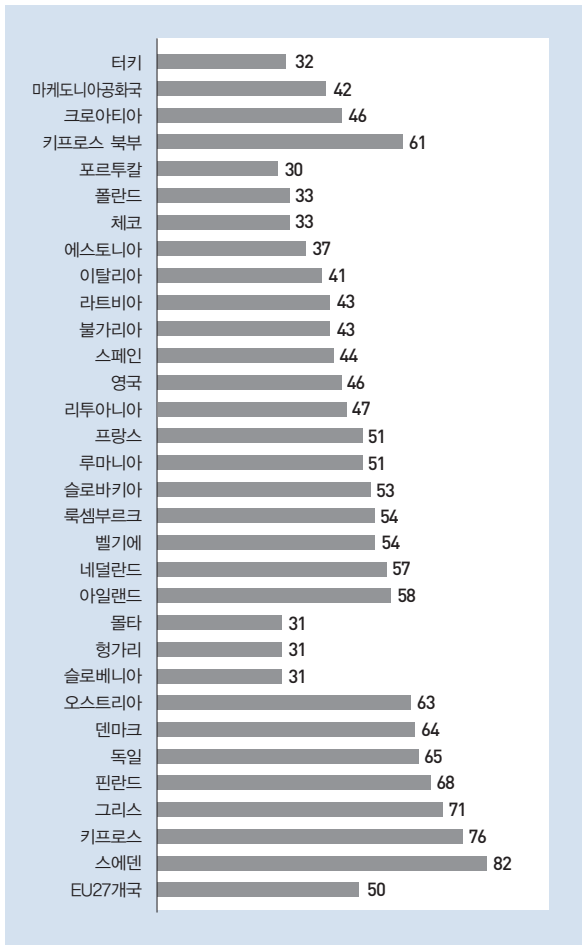






편, 학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빈곤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좌파에 가까울수록 기후변화, 빈곤, 무력 충돌(Armed Conflict)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국가별 비율 (단위 : %)



주: 키프로스 북부는 키프로스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7.), Europeans' Attitudes towards Climate Change (Special Eurobarometer 313).

현재의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를 굉장히 중요한 세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1~10의 척도<sup>3</sup>로 측정했을 때 무려 67%의 유럽인들이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

(7~10)라고 답했다. 특히 그리스와 키프로스 국민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 헝가리, 프랑스에서도 10명 중 8명이 기후변화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반면 영국과 에스토니아의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그다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얼마나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절반 이상의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기후변화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매우 혹은 꽤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기후변화의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인들의 10명 중 6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34%에 이르는 유럽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82%에 달하는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루마니아, 터키, 불가리아 국민의 20% 이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해 대체연료(예: 바이오 연료)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다. 4분의 3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3 1~4: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님  
 5~6: 꽤 심각한 문제임  
 7~10: 매우 심각한 문제임

유럽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친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U의 녹색기술, 재생에너지, 친환경화장품, 친환경 의류 시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종업원을 해고하고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반면, 독일의 녹색기술 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오히려 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기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차원의 정책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덴마크는 해상 풍력발전을 이용한 전력공급 비중이 무려 21.22%를 차지(2007년 말 기준)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EU의 2020년 목표인 20%보다 10% 높은 수치이며,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 면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에서는 태양에너지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연구 개발된 박막필름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투명 태양광 패널로, 2012년 내로 전체 에너지 시장의 28%를 커버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는 EU에 가입한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2009년 1/4분기 현재 녹색전력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1년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정부지원 및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식 변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헝가리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증가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향후 태양에너지원을 이용한 냉난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벨기에에서는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통업체 등 플라스틱 봉투를 대량 사용하는 업체와 국민들이 플라스틱 봉투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포장재 수요를 줄이고 분리

수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 자연분해성 플라스틱 봉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빠르면 2010년부터 플라스틱 봉투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포장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은 천연재료를 원료로 하는 자연분해성 플라스틱 봉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처럼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한 유럽 소비자들을 공략하려면 기업들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대체원료를 사용하며,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 판매 및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언어통합의 어려움과 EU의 다언어정책

## EU의 언어 상황과 언어라는 문제

1993년 단일시장 출범, 1999년 유로화 탄생으로 상징되는 EU는 지역경제 통합의 선두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아일랜드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비준이 마무리될 리스본조약은 EU가 추구해온 정치통합의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렇듯 정치, 경제 분야를 필두로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EU이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으니 바로 ‘언어’ 문제다. 현재 EU 27개 회원국의 공식 언어는 무려 23개다. 이는 다언어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EU에서 제정되는 법규는 23개 공식 언어로 번역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발효된다. EU 정상회의와 각료급 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는 23개 언어마다 3명씩 69명의 동시통역사들이 등장한다. EU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통·번역 업무 종사자 수만 어림잡아 2,000~3,000명에 이르는데, 이는 EU집행위원회 총 인원의 10~15%에 해당한다. 만약 언어통합이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인 유럽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 같은 언어통합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언어정책의 기본은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라는 슬로건에 들어 있다. 그 슬로건에서 ‘통합’이 단일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유럽의회 의사당 건물은 바벨탑의 형태이지만 그 바벨탑이 바벨탑 이전의 시절, 곧 단일 언어의 시절을 향한 꿈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록 언어들은 다르지만 단일한 목소리를 구축하여 내고자 하는(Many Tongues One Voice) 유럽의회의 理想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 3월 EU집행위원회의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핵심 논제는 ‘로만어간의 번역’, ‘다언어주의’, ‘유럽의 구축’이었

다. 이는 번역의 문제가 EU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시켜준 행사였다. 4월 브뤼셀에서 열린 ‘문학 번역과 문화’ 콘퍼런스에서는 번역 중에서도 문학 번역을 문화와 연결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번역’을 중심에 둔 행사들은 언어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기울이는 노력의 산물이다. 화폐통합 같은 언어통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화폐와 달리 언어의 공시적(synchronic) 시스템에 연결된 통시적(diachronic) 전통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가 내세우는 언어 부문에서의 ‘다양성을 조건으로 하는’ 통합은, 그것이 언어의 본성에 대한 통찰에서 온 것이든 아니든, 해당 분야에서의 통합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언어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해 말하면, 모네(Monnet)가 주장한 先문화(언어), 後정치 및 경제통합의 순서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언어의 본성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언어통합의 실질적 의미

EU의 다언어주의는 언어(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달리 보면 그것은 정치, 경제 시스템처럼 인위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언어 시스템의 자율적 저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EU의 언어정책이 다언어, 다문화주의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명하면서도 당연한 타협점이다. 그리고 EU의 시민은 ‘적어도 3개’의 EU 공식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도록 EU가 언어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것은 EU의 언어가 크게 게르만어권(영어, 독일어), 로만어권(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언어권(폴란드어, 체코어 등의 슬라브어권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각 언어권별로 한 개씩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EU 내 언어(의사)소통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

로 보인다.<sup>1</sup> 이 경우 ‘소통’은 ‘통합’의 다른 이름이다. 언어 부문의 통합은 화폐통합과 같은, ‘존재적’ 통합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과정적’ 통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체 또는 전면적(시스템의 교체)이 아니라 일정한 가이드라인(다언어주의, 다문화주의)에 따라 개체들의 차원에서 진행(개인들의 언어활동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 EU의 번역 시스템, 효율성과 언어적 비대칭성

사실 EU의 언어문제가 전면화된 것은 2004년과 2007년을 기점으로 한다. 2003년까지 EU의 공식 언어는 11개(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영어, 덴마크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스웨덴어)였다. 2004년에 9개 언어(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슬로베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체코어)가 공식 언어로 추가되었고, 2007년에 3개 언어(아일랜드어,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가 추가되었다. 즉, 2004년, 2007년 두 해를 지나면서 EU의 공식 언어 수는 기존 공식 언어 수의 두 배를 넘어섰다. EU가 더 이상 언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EU 회원국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의 평등하고 투명한 제공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번역과 통역이라는 언어의 ‘민주적’ 서비스는 대단한 업무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EU의 번역총국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 번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집행위원회 내에서 생산된 주요 문건들은 시발점으로부터 3개의 주요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기술되고, 내부 행정부서들을 거쳐, 다른 외부 기관(예: 유럽의회)에 이를 때까지 原언어를 유지한다. 그리고 의

<sup>2</sup> 만약 아시아에서 EU와 유사한 공동체를 시도할 경우, 이 번역 시스템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고, ‘주요’ 공식 언어로 어떤 언어를 선정할 것인가의 기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될 터인데, EU의 경우 그 기준은 최초 회원국의 언어(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식 언어는 EU 역내에서 話者의 모국어를 제외하고 대화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선정되었다.

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 22개 다른 공식 언어로 옮겨지는 것이다. 3개의 주요 공식 언어를 중심축으로 삼는 이 번역 시스템은 번역자의 수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폴란드어-헝가리어 또는 스웨덴어-이탈리아어 번역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프랑스어-스페인어, 독일어-네덜란드어 등 ‘주요 공식 언어-주요 공식 언어’가 아닌 20개 공식 언어 번역자를 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적으로 비대칭적이지만 효율적이다.<sup>2</sup>

##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언어교육정책

EU 통합의 추진, 형성과 확대에 있어서 본래의 최대 목표는 유럽 내 평화 유지이다. EU의 이 역사적 목표는 EU 차원을 넘어 지구촌 차원에서 EU의 언어교육정책을 통해서도 실현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인 ‘링구아피스 유럽(Linguapeace Europe)’은 세계의 분쟁지역에 파견된 각국의 군인, 경찰, 민간봉사단체 회원 간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EU 회원국 중 11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링구아피스 유럽’은 -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군사 전문용어 교재 개발, 중급 외국어 구사자의 수준을 고급으로 올리는 교육 등을 실행-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EU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소통은 비단 경제적 이득의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 군사적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EU의 언어와 언어정책은 단순한 소통과 경제적 이익 구현의 차원을 넘어, 평화유지라는 ‘EU 프로젝트’의 본질 차원에 연계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

임재호 연세대학교 불문과 교수

**참고문헌** De Saussure, F. & De Mauro, T. (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Commission européenne (2008). *Parler les langues de l'Europe - Les langues dans l'union européenne*. <[http://ec.europa.eu/publications/booklets/move/74/index\\_fr.htm](http://ec.europa.eu/publications/booklets/move/74/index_fr.htm)>  
Europa, Diversité linguistique. <<http://europa.eu/languages/fr/chapter/5>>



#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양호한 무역환경을 구축

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July 2009

세계경제포럼(WEF)은 「2009 세계 무역환경지수(ETI)」라는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가 무역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여 국가별 종합 순위를 발표하였다. 평가항목에는 시장접근, 국경관리, 수송-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121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발표된 것으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한 現 시점에서 한 나라의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국제무역에 개방적이며, 국제무역 및 투자를 그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도구로써 잘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2009년 발표된 무역환경지수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3위를 차지한 스위스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낮은 범죄율과 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자유 경쟁, 뛰어난 비즈니스 제도 및 환경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복잡한 수입관세구조와 농업시장에 대한 높은 보호무역장벽은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덴마크는 효율적인 국경 수송운영능력과 낮은 부패지수로 4위를 기록하였다. 정부의 효율성, 강도 높은 시장 경쟁, 수준 높은 보안(Security)은 덴마크 비즈니스 환경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뒤이어 덴마크의 이웃 나라인 스웨덴은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수송운영능력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범죄와 폭력 문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어려움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수출 대국인 독일은 12위를 차지하였다. 독일은 뛰어난 해상연결망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규제가 높아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7위를 기록하였는데 독일과 같이 높은 수준의 해운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류에 단 두 번만 서명하면 수출입이 끝날 만큼 수출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나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유럽 국가들은 20~70위권을 기록하였다. 발틱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과 헝가리는 수출입 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지만, 낮은 시장 접근성으로 20~40위에 그쳤다. 또한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는 시장 접근성이 낮은 뿐만 아니라 규제, 보안 등 비즈니스 환경과 수송 인프라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50~70위권에 머물렀다.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포르는 모든 측정 기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시장이 외국인에게 폭넓게 개방되어 있어 시장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수송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홍콩 역시 대부분의 측정 기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과 외국인에 대한 기업소유 및 자본 통제가 없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각국의 보호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세계무역이 침체에 놓인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무역환경을 평가함으로써 무역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

# 이탈리아의 유로화 채택의 득실

Does it pay to have euro?  
Italy's politics and financial markets under the lira and the euro  
ECB, June 2009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는 유로화 채택의 대가를 치루고 있는가? 리라(Lira)와 유로(Euro)하에 서의 이탈리아 정치 및 금융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과연 유로화 도입이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로화 출범 10년이 지난 오늘날, 유로화를 채택한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 및 논의가 활발하다. 회원국들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했지만 EMU가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유로화 채택의 득(得)과 실(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 나라의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국내 경제정책의 수립은 개별변수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 및 불안정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로화 도입을 통해 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내의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치적 충격에 의한 영향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취약한 정치 시스템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경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회전문인사(Revolving door), 스캔들, 부패 등 수많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가 리라화를 포기하고 채택한 유로화가 금융위기와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치적 혼란에 대한 '방패'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유로화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

정성 및 충격의 영향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분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가격은 미래 경제전망 예측을 위한 정확한 수단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이자율, 자본시장 및 환율의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정치적 사건들은 1973~2007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벌어진 정치관련 자살, 사임, 선거, 테러 등을 포함한다. 그 결과 유로화 채택 이전에는 정치적 사건들이 이탈리아의 금융시장에 통계상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사건들은 단기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자산수익률을 감소시키며 리라화의 실효환율을 절하시켰다. 그리고 이는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1999년 이탈리아에 유로화가 도입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이러한 상관관계는 붕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1990년대 말 이후부터 ECB의 통화정책과 「성장 및 안정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해 제한된 재정정책으로 이탈리아의 금융시장은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점차 분리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서 공동통화 도입에 따른 이익과 비용분석을 고려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의 통화를 채택하려는 국가들(달러 도입을 고려하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혹은 유로화 채택을 고려하는 동유럽 국가)에게 이탈리아에 대한 분석 및 결과가 공동통화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 일본 게이오 대학 EU센터 주최 심포지엄 참석

EU집행위는 EU센터 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 EU센터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연세-SERI EU센터는 7월 24~26일 2박 3일로 일본 게이오 대학 EU센터를 방문해 활동분야별 업무 협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연세-SERI EU센터와 부산대 EU센터가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게이오-히토츠바사-초다 대학의 도쿄 내 EU센터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운영방법 벤치마킹,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해외 네트워크 구축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국제학술대회 등 양국의 EU센터 간 행사 협조 및 교류 확대, 공동 연구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30일 제2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가 삼성경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환경 선진국인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新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되어 관세 장벽이 사라지더라도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이귀호 실장과 (주)세이프 케미컬의 정옥선 대표가 참석해 EU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新재생에너지 정책과 환경규제의 현황 및 전망을 듣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세미나 관련 8월 3일 「한국경제신문」 기사